

### 북핵 6자회담 타결

주요 내용과 의미

# '불능화' 명시... '9·19 합의' 이행 첫걸음

## 보상 품목 식량 등 다원화 60일 초기조치 이행이 관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엿새 간의 숨가쁜 고비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닳을 올리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긴 항해를 시작했다.

◇배경과 의미=송민순 외교교통상부 장관의 말처럼 9·19 성명이 1막이라면 이번 합의는 2막1장의 시작인 셈이다. 이제 '2·13 공동성명'으로 불리게 됐다.

이번 합의는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틀을 천명한 '말 대 말' 합의인 2005년 9·19 공동성명과는 달리 '행동 대 행동'의 실천계획 성격이라는 점에서 목표점을 향해 첫 발걸음을 뒀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문에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명시한 것은 단순 동결이었던 제네바 합의보다 비핵화에 훨씬 더 다가간 행동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보인다.

나아가 워킹그룹을 통해 북·미 및 북·일 대치구도를 바꿀 수 있는 관계정상화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한반도가 봄을 맞이하고 동북아 질서 재편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불능화' 명시와 보상품목 다원화가 핵심=합의 내용이 종전 북핵 합의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던 1994년 제네바 합의의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우선 플루토늄 생산 관련 시설의 폐쇄에 해당하는 '셋다운'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복귀를 60일 내에 하는 것으로 못박은 데 그치지 않고 '불능화'(disabling)를 이행 양태로 잡아넣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보상 원칙은 품목 다원화다. 과거 중유가 주요 보상 품목이 됐다면 이번에는 뭐든지 북한과 양자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중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 스탠스에 비해 미국의 경우 식량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른 특징은 일종의 성과급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북한이 일단 핵시설을 셋다운하고 IAEA 사찰관이 복귀한다면 동시에 중유 5만t을 제공하도록 돼 있고 불능화 조치를 중유

95만t으로 환산할 수 있는 품목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다.

특히 6자 외에 다른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한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EDO) 경수로사업에 이어 또다시 '덫터기'를 쓰게 됐다. 여론의 화살을 비껴갈 수 있게 됐다.

◇곳곳에 지뢰밭...낙관만 힘들어=이번 합의를 통해 작게는 한반도 비핵화, 크게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우선 한 달 내에 가동할 5대 워킹그룹의 운영 방향과 3월로 잡힌 6자회담, 60일 내에 이뤄질 초기 조치의 향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60일 내의 초기 조치는 향후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지 여부를 내다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핵시설 폐쇄와 중유 5만t 지원 등 만만치 않은 현안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잠복해 있는 현안으로는 BDA 문제가 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13 합의	제네바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면 핵시설 폐쇄/방문</li> <li>- IAEA 사찰관 감시 복귀</li> <li>- 초기이행조치 이후 모든 핵프로그램 일시 중단</li> <li>- 60일 내 긴급 폐쇄/지연 중유 95만t 지원</li> <li>- 모든 핵시설 불능화/총 100만t 중유의 경제-에너지 인도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면 핵시설 동결</li> <li>- 양면 핵시설 동결/중유 95만t 지원</li> <li>- 사용후핵연료(SNLF) 안전보관 및 재처리와 방위용으로 처리 방안 상구</li> <li>- 한반도 비핵화/중유 95만t 지원</li> <li>- 양면도 비핵화/중유 95만t 지원</li> <li>- 양면 핵시설 동결/방문, IAEA 안전 조치/방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일 내 긴급 폐쇄/지연 중유 95만t 지원</li> <li>- 모든 핵시설 불능화/총 100만t 중유의 경제-에너지 인도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면 핵시설 동결</li> <li>- 양면 핵시설 동결/중유 95만t 지원</li> <li>- 양면 핵시설 동결/중유 95만t 지원</li> <li>- 양면 핵시설 동결/중유 95만t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이행조치 이행시한 60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시설 동결에 따라 중유 95만t 지원</li> <li>- 양면 핵시설 동결/중유 95만t 지원</li> <li>- 양면 핵시설 동결/중유 95만t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워킹그룹 가동/200일</li> <li>- 6자회담 당사국 외부장관회의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시설 동결에 따라 중유 95만t 지원</li> <li>- 양면 핵시설 동결/중유 95만t 지원</li> <li>- 양면 핵시설 동결/중유 95만t 지원</li> </ul>



북핵 6자회담이 13일 6개국의 합의로 타결된 가운데,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의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폐막식 후 천영우 한국측 수석대표와 김계관 북한측 수석대표가 활짝 웃으며 악수를 하다가 김계관 주중 대사가 좀더 가까이 서서며 북측 김 대표를 살뜰히 안고 있다. /연합뉴스

##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커져

남북관계 해빙...쌀·비료 지원 재개될 듯

상봉행사 중단을 선언하고 당국 간 대화를 단절한 점에 미뤄볼 때 남북관계는 남북관계 복원의 핵심 열쇠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보된 남북지원은 6자회담이 진전되거나 남북대화를 통한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쌀·비료 지원 문제를 논의하려면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비료 지원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이 열린다면 이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열차 시험운행 등 다양한 남북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산가족상봉을 논의하는 적십자회담, 경공업 원자재 제공 등을 위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각종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성사되고 작년 5월 예정됐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열차 시험운행도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에도 훈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측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측은 얻을 것이 없다"며 "이 일은 순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순차적 사안으로 평가했다.

이는 6자회담이 진전을 이루면 정상회담 개최 여건도 성숙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케 한다. /연합뉴스

### '동결'은 핵시설 가동 중단 '불능화'는 영구 폐쇄

#### ■북핵관련 용어 해설

베이징 6자 회담 합의 내용에는 북한 핵시설의 '동결'(freezing), '폐쇄'(shut down), '불능화'(disabling) 등 비슷한 뜻을 가진 용어가 등장해 다소 혼란스럽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비핵화 이행 조치의 수준과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들도 정확히 구별돼 사용되고 있다.

▲'동결'(freezing)=말 그대로 북한의 비핵화 1단계 조치로 북한 영토에 있는 5MW 원자로 등의 가동을 중단(cease)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스위치를 내리는 수준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하지만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는 느슨한 조치여서 북한을 제외

한 6자회담 참가국들에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폐쇄'(shut down)=동결보다 더 강한 개념이다. 동결이 핵시설에 대한 접근과 수리를 허용한다면 폐쇄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

▲'불능화'(disabling)'=핵시설 폐쇄보다 더 강한 수준이다. 이는 원자로 핵심장치의 기능을 제거하는 '영구적 폐쇄'라고 할 수 있다. 주요 핵시설의 목록을 제공하고 핵물질 안전 관리 및 연료봉 감시를 허용하는 조치도 여기에 포함된다. 물론 이보다 확실한 비핵화 수단으로는 영구 폐쇄를 의미하는 '해체'(dismantling)가 있다.

## 北 핵무기도 포기할까

핵시설과 별개 사안 접근...북·미관계 정상화에 달려

북핵 문제가 타결을 봄으로써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6~7기의 핵무기를 포기할 지 여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핵실험 후 핵문제 해결에 있어 핵시설 폐기와 핵무기 포기문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한반도 비핵화 공약이행의 노정도(로드맵)와 관련, "현 단계에서 핵무기를 제외한 현존 핵계획의 포기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입장은 2005년 채택된 9·19공동성명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며 핵무기 포기를 명시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정세변화를 내세우고 있다. 즉 9·19 공동성명 이후 미국이 성명의 원칙을 배반했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새로운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북한은 초기 이행조치 단계에서 완전한 핵무기 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핵 프로그램 폐기 과정에서도 경수로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협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더욱이 북한은 여러 해 동안 핵 개발에 많은 정력과 자금을 들여왔고 체제 고수를 위해 '선군정치'의 깃발을 내걸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는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도 핵무기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궁극적으로 체제보장이 담보되는 북미관계 개선 단계에 이르러서야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분석관과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핵포기에 따른 보상이나 정전협정의 평화조약 대체와 같은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존재와 체제를 인정해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이번 합의로 핵포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며 "북한이 이번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기존 핵 정책을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 폐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결단만 서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북·미 양국 지도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6자 외무장관 회담을 열기로 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창립기념 특가 세일!!

# 호남지역의 고급 여행브랜드 소리투어

## 창립기념 특가 일본 고급골프3박4일

# 299,000원

출발일 : 3월 5일(단1회)  
 선착순 : 20명  
 포함내역 : 영문클럽 36홀, 카메리아 (2동선), 통나무골프도 (다만실)  
 불포함 : 클럽내 중식(2식)  
 \*부동산별 도착기준입니다.

## 소리투어

여행 전문